



## ■ 시험대에 오른 브라질의 대 주변국 외교

박 원 복

현 브라질의 룰라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자국을 소개할 때면 항상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대국”이자 “남미 지역의 리더”라고 소개한다. 그런데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 그것에 걸맞은 위상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 그리고 외교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주변국들과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차원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변국과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면서 더욱 분명하고도 민첩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항상 더뎠으며 또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해왔다. 실제로 이웃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해결 노력이라든가, 최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몇몇 이해 당사국들의 반발로 인하여, 5월 6일로 예정되었던 이란 대통령의 브라질

공식방문 취소 등과 같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브라질 정부가 보여준 자세만 보더라도 이미 그러한 면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그 횡수가 최근 몇 년 사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가까운 주변국들을 위시한 외교정책에 대하여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09년 5월 7일 브라질을 방문한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오른쪽)을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우선 남미 이웃국가들과의 관계에서만 보더라도 현 브라질 정부는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적합한 해결 시스템이라든가 적절한 외교적 역량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위상을 세우려려는 현 룰라정부의 노력과 비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예를 보자. 2006년 볼리비아에 있는 브라질석유공사 페트로브라스(Petrobrás)의 정유시설 두 곳을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국유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브라질 정부가 보여준 무기력하고 소심한 대처의 파장은 곧장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를 거쳐 파라과이에게로 번졌다. 파라과이의 경우는 최근 들어 1973년에 맺어졌던 양국 국경지대의 이타이푸(Itaipu) 발전소 조약까지 문제시하며 브라질 정부의 대응력을 시험중이다.

물론 브라질 외무부는 이웃국가들의 그러한 자세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정작 자국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린 문제들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미적거리는 인상을 줌으로써 자국 국민과 언론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해있다. 그렇기에 현재 브라질이 겪고 있는 파라과이와의 문제는 현 정부의 외교역량을 시험하는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정부는 지난 대선 때, 61년째 집권중인 콜로라도당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타이푸 댐 운영에 대한 조약을 재협상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왔고, 극우부터 극좌에 이르는 위협스러운 연정을 통해 선출된 뒤에는 브라질 정부에게 자신의 정부가 원하는 내용을 열거하면서 룰라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사실 허약한 연정의 내적인 문제들과 국내 경제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파라과이 대통령은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브라질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자국의 이해관계에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들고 온 현안이라는 목록에 포함된 이타이푸 수력발전소 계약 재협상 문제는 크게 동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써 브라질측이 의무적으로 구매하기로 했던 잉여 전력의 가격 현실화와 댐 건설에 소요되었던 파라과이의 외채 탕감 문제로 나뉜다. 그런데 파라과이의 루고정부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현 정부는 2007년 파라과이 정부가 이타이푸 건설비용 차관문제를 거론하였을 때, 양보를 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이타이푸 관리회사의 부채를 브라질 정부 부담으로 10억 달러 탕감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잉여 생산 전력에 대한 보상비도 재조정하여 결과적으로 브라질 소비자의 전기세부담을 인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양보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 정부가 끈질기게 재협상을 요구하자 브라질 정부는 20개 항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공동투자자로 8년간에 걸친 공사 끝에 1982년 완공된 이타이푸 댐

의 대안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에는 보상 명목으로 170만 달러를 추가 제공하며 이어 파라과이의 기간산업 및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제안은 파라과이 정부에 의해 무참히 거부되고 말았다. 당시에 파라과이 정부 협상 담당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의 제안을 “웃기는 얘기”라고 일갈함으로써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범했다.

브라질 정부도 파라과이 협상팀의 태도에 ‘경악과 충격’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놀라움과 분노를 표시하였지만 협상에는 계속 임한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되었고, 공동발표문 조차 나오지 않았다. 결국 “떠오르는 대국”임을 자처하는 브라질은 파라과이 정부의 요구에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타이푸조약 변경 요구를 완곡하게 거부하는 어정쩡한 외교적 자세를 보여 자신들이 원하는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외교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 되었다. 그 결과 특유의 ‘삼바외교’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지만 브라질 스스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소극적인 듯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국내에서조차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이번 문제가 단순히 파라과이와 브라질 문제를 넘어 베네수엘라를 비롯하여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 주변국과의 관계와 연계됨으로써 사태는 당분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은 EU와의 자유무역지대 협상에서 EU 대(對) 남미남부공동시장의 협상을 추진하기보다 개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좋지 않은 시각을 받고 있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보다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룰라대통령이 오는 6월 파라과이를 공식 방문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다시 해결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올 10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 룰라대통령의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는 것으로서 비타협적인 자세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라과이 정부와, 파라과이 정부에 대한 반감 및 적극적이지 못한 룰라정부에 실망하고 있는 브라질 내 야당 및 국민들 사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묘안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브라질 야당과 언론들은 파라과이 정부가 원하듯이 국제사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이미 후퇴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온 파라과이 정부에게 한발 물러설 명분을 줄 수도 있으며 올 연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룰라정부도, 파라과이 정부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중재에 따르는 명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